

제주 해녀 공동체의 공유지 관리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이종호** · 송원섭*** · 권경희**** · 조철기*****

The Self-governance of the Commons and the Socio-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Jeju Haenyeo Community*

Jong-Ho Lee** · Wonseob Song*** · Kyung Hee Kwon**** · Chul-Ki Cho*****

요약: 본 연구는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으로 공동체 자치 모델에 대한 기존 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공유지 관리의 필요 요소와 방해 요소를 도출한다. 이러한 요소를 성공적 공동체 자치 모델로 인정받는 제주해녀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비교 분석하여, 현재 당면한 내·외부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 내부 기제가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제주해녀 공동체 자치의 지속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사례에서 도출된 공동체 자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따라 제주해녀 공동체 내부 작동 기제를 분석한 결과, 신뢰와 호혜성을 향상시키는 생산과 분배체계, 내재된 공동체 의식, 공식·비공식 조직의 역할 분담과 조직 내 제도화된 명시적, 암묵적 규범은 지속가능성의 내·외부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폐쇄성, 생산성의 위기, 동질성의 약화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내·외부 약점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향후 공유지 관리를 위한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해녀학교를 활용한 노동의 재생산 기능의 재정비, 공동체 생업 및 문화 전승 주체의 명확성과 해녀 중심의 권한 유지, 그리고 해녀들의 기타소득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어: 공유지의 비극, 공동체 자치 모델, 제주해녀 공동체, 지속가능성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revious research on ‘The Self-Governance of the Commons’ to overcome ‘The Tragedy of the Commons’, and derives elements for successful commons management. These factors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social and economic attributes of the Jeju Haenyeo community, a successful community self-governance model. In addition, in the recently changing environment, it is revealed whether this internal community mechanism can be useful in the future. The goal is to reveal wha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will help the sustainability of the Jeju haenyeo community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rnal operating mechanism of the Jeju haenyeo community,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2022S1A5A2A03052859).

** 제1저자: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사회과학연구원 마을자치배움센터장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hl@gnu.ac.kr)

*** 공동저자: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ssong@jbu.ac.kr)

**** 공동저자: 대구교육대학교 시간강사 (Lecturer,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wonspider@naver.com)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kcho@knu.ac.kr)

system that improves trust and reciprocity, the inherent sense of community,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organizations, and the institutionalized explicit and implicit norms within the organization served as internal and external strengths of community sustainability. However, the closure of the network, the crisis of productivity, the weakening of homogeneity, and the emergence of new subjects acted as internal and external weaknesses. In conclusion,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Jeju Haenyeo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eproductive function of labor using the haenyeo school, to maintain clarity on the subject of livelihood and cultural transmission, and guarantee the income of Haenyeo.

Key Words : tragedy of the commons, self-governance of the commons, Jeju Haenyeo community, sustainability

1. 서론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Science)」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그는 공유지의 비극을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므로 이용이 개방된 ‘공유지’의 경우 과다 이용으로 인해 공멸하게 된다는 논리로 설명했다(김윤상, 2010). 즉 공유지 비극론의 전제는 개인이 개인적 합리성에 기초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사회적 합리성은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최재송 외, 2001). 따라서 공유지의 비극론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제를 ‘입법화’하거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강압적 장치’의 마련, 혹은 ‘사유재산권’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하딘의 이러한 주장 이후, 사유화 과정이나 정부의 강압 및 제재와 같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공유지가 성공적으로 관리되는 무수한 사례가 연구되었고, 대표적으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1990)은 시장(사유화) 아니면 국가(입법화)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공동체 자치’를 공유지 비극의 대안적 극복 방법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그 연안의 어부들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관리되는 ‘마을어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마을어장은 공동체적 총유(總有)를 바탕으로 설립되어 해당 어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자

원으로 유지되었다(김도균, 2010; 최재송 외, 2001).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과 최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달에서도 여전히 마을어장이라는 마을 공유지를 기반으로 하여 어촌 공동체는 생산양식에 있어 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주해녀 공동체’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대안적 형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제주해녀 공동체는 마을어장의 자원을 공유하여 공동 생산활동을 한다. 제주해녀 공동체는 공동 생산활동과 이를 통해 얻은 자원의 일괄 판매방식이라는 일반적인 어촌 공동체의 특성 외에도 ‘물질’이라는 특별한 어로 방식으로 인한 개별 해녀 단독 잡수의 위험성으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해 왔으며, 실력에 따른 상군, 중군, 하군의 엄격한 공동체 조직의 구분은 신뢰와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암묵적 지식의 학습, 자율적 감독과 규범의 준수를 용이하게 했다(강경민, 2015; 고은솔·정상철, 2018; 해녀박물관 발간자료, 2009). 이러한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해녀어업’은 2015년 12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에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해녀’는 2017년 5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미, 2023; UNESCO and Heritage 홈페이지).

그러나 현재 제주해녀 공동체의 존립과 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은 내·외적 위협 요소에 직면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해녀 공동체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불가항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산성이 불규칙해졌고(김권호·권상철, 2016) 산업화와 전승 주체인 해녀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의 재생산은 더욱 힘들어졌으며, 문화유산 지정 이전, 단일 생산 공동체였던 제주해녀 공동체에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게 되면서 동질성이 흐려지고 구성원들은 생업 이외 문화전승과 관련된 새로운 활동을 겸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공동체로서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공동체 차지 모델에 대한 기존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공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 요소와 방해 요소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생산방식 내에서 제주해녀 공동체가 공유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내부 사회·경제적 속성을 비교 분석하고, 현재 당면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 내부 기제가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효율적인 공유지의 관리를 위한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공유지 비극론과 대안적 관리 모델

1) 하딘의 공유지 비극론

흔히 공유지는 누구나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즉,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만인의 소유물’로 개념화되었다(윤순진·차준희, 2009). 이와 같은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공유지의 특징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으로 이해된다. 비배제성이란 다수의 개별 주체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특성을 의미하며 경합성은 공유지에 대해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최재송 외, 2001).

하딘(Hardin, 1968)은 이와 같은 공유지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공유지 비극의 전개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목초지를 예로 들며 합리적인 존재로서 각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소를 기르려고 노력할 것이며, 결국 목초지는 과도하게 이용되어 황폐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딘에 따르면 공유지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므로 공유지를 이용하는 합리적인 개인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공유지 전체에 대한 최선의 이용과 유지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김윤상, 2010; 김민주, 2015).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공유지의 접근과 사용을 그대로 두었을 때 이러한 비극은 예견된 것이므로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원의 사유화’와 ‘강압적 장치’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올슨(Olson, 1965) 역시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하는 강제할 장치가 없는 한, 합리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집단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유지의 특성, 즉 비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하딘을 비롯한 이후의 논의들에서는 두 가지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공유자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부여로, 관리책임을 가진 재산권 소유자만이 공유지를 이용하도록 제한하면 자신의 재산권이 부여된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유자들은 자발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관리를 수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공유지가 보전될 것이라는 논리이다(윤홍근·안도경, 2010). 그러나 애초에 합의의 통해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현실에서 사유화될 때 나누어진 공유지의 조건들이 모두 동등할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한다(김민주, 2015). 그렇지만 세계가 자본주의적 가치 아래 급속도로 개편되자 자연환경의 사유화 및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은 열대 우림 파괴, 생물의 다양성 감소,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다(김권호·권상철, 2016).

두 번째는 강제적인 법 집행이나 조세 징수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전체 국민이 공유지를 소유하지만, 국민이 관리자들을 임명하여 자신들을 대신해서 공유지의 이용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윤순진·차준희, 2009; Hardin, 1968; Ostrom, 2003). 하딘 역시 ‘상호합의된 강압’만이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주장했고 대부분의 전통적인 이문들에서도 공유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해 왔다(최재송 외, 2001). 그러나 현실에서 중앙통제에 의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나 외부인이 ‘강압’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한다는 것이 어렵고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또 감시할 때 드는 비용과 적발 시 부과해야 하는 처벌의 강도 등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하딘 역시 사용에 있어서 많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공유지에 대해 ‘금지하는 입법화하기 쉬우나 절제를 어떻게 입법화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Hardin, 1968).

2) 대안적 공동체 자치 모델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정부의 강제나 사유재산권 설정의 한계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수의 공유지 사용자들 간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공동체 자치 모델이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았다(최재송 외, 2001). 즉 이 모델에서 성공적인 공유자원 관리의 핵심 요인은 ‘공동체’이며 대표적인 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은 사용자들 스스로 자발적 합의에 따른 방법이 공유지 황폐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명시된 합의 내용은 공유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정한 결과로 구성된다(김민주, 2015). 또 별도의 감시자를 두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 감시가 가능하며 제재 역시 공동체 내 평판, 비난, 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합의가 쉽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자치 모델은 이전 모델의 한계점을 상당 부분 극복한다.

결국 이상의 모델들은 공유지의 비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사용자의 불안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공유지는 ‘만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 소유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잠재적인 사용자는 배제된다’는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Berkes, 2005). 이에 대한 근거로 버크스(Berkes, 2005)는 네 가지 재산권 제도의 구분으로 공유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어떤 특정 체제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개방적 접근 체제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인다(표 1).

결국 공유지 관리의 누가 개방적 접근에 대해 잠재적 사용자를 배제하고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사유화나 국가의 강압으로 인해 나타내는 관리의 비효율적 문제를 사용자 공동체의 자발적 규칙 제

표 1. 재산권 제도의 구분

구분	특성
개방적 접근(Open-access)	재산권의 부재 상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움
사유 재산(Private property)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자원 사용을 규제할 권리가 있는 상황
국가 재산(State property)	정부에 접근 통제와 사용규제에 대한 권리가 독점적으로 귀속된 상태
공유 재산(common-property) 혹은 공유지(communs)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사용자 공동체가 존재

출처: Berkes, F., 2005 필자 재구성

정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대안적 관리 주체인 공동체의 존재는 결국 공유지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3) 공동체 자치 모델의 사례

공동체에 의한 공유지 관리의 기존 사례 연구는 공유지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 공동체 내부 기제의 작동 형태와 성공적 운영 원리를 보여준다(표 2).

아래 사례들을 통해 공유지에 대한 공동체 자치 모델

의 성공과 방해 요소를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과 분배체계

성공적인 공동체 자치 모델은 생산과 분배의 형평성, 즉 공동생산과 균등 분배를 기본 요소로 한다. Swiss Village의 경우 토지의 주기적인 재할당과 노동, 물품 또는 수입의 균등한 분배가, 장영마을의 경우 공동생산, 균등 분배 전략이 구성원들에게 공유자원에 대한 공동의무와 권리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동체에 의한 공유자산 운영은 경제적 합리성

표 2. 공유지 관리의 공동체 자치 모델 성공과 실패 사례

구분	사례지역	공유지 관리에 관한 특성	
성공 사례	Turkey, Ayvalik-Haylazli 석호 어업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어장 내 모든 어민이 소속됨 • 가입조건: 6개월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없는 자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지역으로 협동조합에 의한 감시 용이
	Turkey, Tasucu Bay 해안 어업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회원 모두 같은 마을 출신 • 권한: 조업 권리가 회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 이점이 존재 • 역할과 제재: 수산물 가격의 보장과 시장통제를 위한 냉동/냉장 시설 운영, 보조금을 통한 장비 판매, 저인망 어선 및 다이내마이트를 사용하는 조업 등으로부터의 어민 보호
	Turkey, Alanya 해안 어업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마을에 등록된 어부의 절반 정도만 소속. 가입 의무가 없으며 협동조합 자체 경제력이 약함 • 권한: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어부의 어업권에도 제한 없음 • 어업권의 계약과 제재: 어업 참여 희망 어부는 어장 목록과 합의 사항 승인의 계약 과정을 거치는데, 계약서 작성은 지역 커피숍과 같은 비공식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계약서는 시장과 지역 경찰에 기탁. 계약 위반 시, 사회적 제재 혹은 폭력적 위협
		비공식적 어부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 회유성 어종 시즌 동안, 어업 권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함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 스포츠 낚시꾼과 스피어 피싱(창, 작살을 사용하는 낚시 방법) 다이버 수 증가로 전직 어부 혹은 일부 어부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 어선은 관광객들에게 전세를 내어 수입 보충
	Swiss Vill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권리 균형 유지의 이유 1. 최소 500년 동안 존재한 공유자원에 대한 개인 및 공동체의 권리 2. 환경적 한계와 공유자원의 특성: 불리한 자연환경 조건, 수용 능력 한계로 인한 관리의 필요성 3. 노동 시장 작동의 효율: 진입로 유지, 눈사태에 의한 목장 복구, 샘물 청소, 거름 재분배 등 자원의 유지 관리를 일 년 중 단 며칠 내에 효율적으로 공동작업. 나머지 기간, 노동력은 건조 재배, 우유와 치즈 생산 가능 4.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알프스 협회 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5. 생산과 분배: 산림 성장률 고려하여 표시된 나무에 대해 추첨으로 팀별 할당, 균등 분배 6.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 길과 도로의 존재 	

구분	사례지역	공유지 관리에 관한 특성	
성공 사례	Canada, Port Lameron Harbor 해양·해안 어업	비공식적 어업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로 구성. 현재 어민들의 대다수는 18세기 이후 해당 지역 어부들의 자손/친족 관계로, 구역별 우선 접근권과 통제권 보유.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연결에서 파생된 공동체 의식과 연대를 가짐 • 조업 규정 및 전략: 역사적 깊이가 있는 규정 및 전략. 경험을 통해 개발한 비공식적 자원 관리 전략을 반영하여 구역 지정, 사용 도구 설정, 수익과 위험 요소의 균형, 부당 이익 대응 규정을 정함 • 정부 규제에 대한 입장: 연방 수산부는 공유지 비극론적 입장으로 수산자원을 국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고 자원이 사회적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입하려 함. 그러나 어민들은 이러한 정부 결정의 대부분이 어민들과의 협의와 토론 없이 내려진 지시이며 어업 관행이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지역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어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자치권 행사를 위해 맞섬 • 소유권 vs 우선 접근권: 우선 접근권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출생지 또는 공동체 구성원과 친족 관계라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권한으로 해양 자원 재산권의 본질임
	강원도 강릉시, 송림리 소나무 마을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지적 속성: 사유 상태에서도 공동의 이해에 따라 관리되면 마을 숲이 유지될 수 있음. 즉 공유지 보전을 위해서는 사적 재산권의 부여 여부가 아니라 공유지적 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이 중요함
	부산광역시, 가덕도 승어들어	어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 조업 자격 부여 • 가입조건: 마을 실제 거주
		비공식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수입의 분배, 마을 기금 적립 비율 조정, 조업에 대한 건의 사항, 갈등 해결의 장치 마련 등 • 외부 권력의 침해가 없는 자치권 보유
		감시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들에 의한 상호 감시. 규칙 위반 시 도덕적 비난과 승어들어 참여 제한의 처벌 관례
	충청남도 보령시, 장영마을 (섬마을, 가명)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마을어장의 활성화로 세대 수 증가 • 역사적으로 강한 공동체성 가짐 • 서비스업은 비전문화된 소규모 사업장으로 원주민에 의해 경영 • 공동생산 균등분배의 원칙, 감시활동 참여 의무화, 노인들의 적극성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총회와 어촌계 중심으로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존재 • 마을총회가 마을어장의 운영 주체이며 어촌계는 마을총회의 하위조직으로 협력함 • 어촌계 가입조건: 20년 이상 거주 & 적극적 참여. 마을거주자는 반드시 마을 공동작업에 참여해야 함 	
실패 사례	Turkey, Bodrum 해안 어업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많은 어민 집단의 존재로, 단일 조직이 모든 어민 집단을 대변할 수 없게 되어 1983년 지역 협동조합 해체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어선, 저인망 어선, 건착망 어선 등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시장 접근성의 향상과 관광지 발전으로 저인망 선단이 발달하면서 소형 어업 붕괴 • 현재 자원고갈로 저인망 어선 어업도 붕괴 • 새로운 그룹의 등장(대규모 어업 업자, 잉여 물고기 판매자, 미숙련 관광 어부, 작살 어부, 전세 보트 운전자 등)으로 갈등 발생
	Turkey, Izmir Bay 해안 어업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다양한 어업 구역에 여러 개의 조합이 존재. 많은 수의 협동조합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는 형태 • 역할과 제재: 어장관리나 자원 파괴로부터 어부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만을 대변함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 좋은 시장, 어장을 사용하는 다수의 집단이 자주 충돌함 • 환경오염으로 어업 금지 지역 발생. 또 도시개발로 어린 물고기 서식지인 종모장 파괴

구분	사례지역	공유지 관리에 관한 특성	
실패 사례	충청남도 보령시 사구마을 (섬마을, 가명)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화로 세대 수 증가 • 이주민에 의한 서비스업 발달. 서비스업은 대부분 전문화된 사업장으로 이주민에 의해 경영, 이주민들은 마을총회에 참석하지 않음 • 개별생산 차등 분배, 감시활동 참여 의무화 • 지역의 범위가 넓고 펜션업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 존재 • 정부의 획일화된 관광지화 정책으로 사회관계 악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총회와 어촌계 외 숙박업 종사자로 구성된 번영회 존재 • 마을 어장은 2011년까지 외지인에 의해 위탁 운영되었는데 이장과 어촌계장의 부당 이득, 권력다툼으로 2012년부터 어촌계가 마을 어장 운영 • 어촌계 가입조건: 20년 이상 거주 → 양도 가능하도록 완화

출처: Berkes, F., 1986; Netting, R. McC., 1976; Davis, A., 1984; 윤순진·차준희, 2008; 김민주, 2015; 이정림, 2016

보다 호혜와 재분배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재분배 과정은 자신의 능력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타인의 능력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높여 상호 호혜성과 연대성을 형성한다.

(2) 조직의 역할

공유자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는 협동조합 또는 마을 내 기타 조직이 공동체 관리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실패 사례인 Izmir Bay 해안어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수가 부족하지 않았으나 조합들은 시장 점유율에만 집중하여 공유자원에 대한 ‘배제’와 ‘경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이익에 대응하거나 어장관리, 공동이익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Berkes, 1986). 반면 성공사례인 Alanya 어장은 어부의 절반만이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지만, 협동조합 사무실과 같은 공식적 장소가 아닌 비공식적 장소인 지역 커피숍 등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협동조합의 존재 자체나 구성원의 공식적 조직 가입 여부가 성공적인 어업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규범과 제재, 감시와 통제, 최소한의 수익 보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 등 조직의 기능과 조정자로서 역할이다. 장영마을의 사례 역시 초기부터 주민생계와 마을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발적 조직이 구성됐으며, 조직은 생산량이나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속의 목적하에

조정자로서 마을어장을 관리했다(이정림, 2016).

(3) 제도화된 규범

성공사례의 공동체에는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명시적 제도뿐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암묵적 규범이 제도화되어 있다. Swiss Village의 경우 1200년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관습을 따르고 있으며 1400년대 Törbel 주민 22명으로 구성된 지역 단체, 자발적 협회의 존재와 1500년대 공동체 방목 규칙과 벌금에 대한 규정이 문헌으로 전해 내려온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통’이라 불리는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암묵적 약속이며 오랜 역사를 가진다. Alanya 어업의 경우,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최고의 장소에서 생산을 최적화하고 모든 어부가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개발했다(Berkes, 1986). 성공적인 자치 모델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에 의한 규범의 가치를 인식하고 엄격히 따른다.

(4) 공동체 구성원의 속성

구성원의 동질성은 조직 운용에 유리하다. 구성원이 동질적이면 자원의 현지 지식에 대한 기본사항 학습 및 전달과 상호작용 용이성이 있고 또 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합의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반면 다른 형태의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 집단이 많아지면 공동체의 이질성이 높아지며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Bodrum의 사례에서는 지역 내 공유자원 사용 그룹이 많아지자 그룹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갈등하는 집단이 많아지고 단일 조직이 모든 어민 집단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협동조합은 해체되었다(Berkes, 1986). 공유자원의 공동생산과 균등 분배체계를 가진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갈등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성공사례에서는 농업에 더 비중을 두거나 비교적 최근에 어업으로 전환한 어부들이 조합의 구성원으로 혼재하기도 한다. 즉 인위적인 견습 과정, 경험의 축적, 지역 내 비공식적 조직을 통한 교류로 이질성은 극복될 수 있다.

(5) 공동체 의식

성공적인 공유지의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지의 ‘소유권’보다 사용에 대한 ‘공유 의식’이 중요하다. Swiss Village 사례의 경우, 공동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상속·양도할 수 있는 소유의 권리와 목재 벌채 등 사용의 권리로 분리하고 있다. 즉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용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권을 가진 구성원들이 운영과 관련된 각종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사용권은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포함한다. 송림리 소나무 마을 숲 사례 역시 사유의 상태라도 마을주민에 의해 공동 이해에 따라 관리되었을 때는 마을 숲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사유화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주가 마을의 공동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마을 숲이 파괴됨을 보여주었고 있다. 즉, 공유지의 보전을 위해서는 재산권의 소유관계보다 공유지 속성 유지, 공유성의 회복이 중요하다.

(6) 정부의 역할

정부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정부의 획일화된 정책과 일방적 개입은 공동체 질서를 약화시킬 수 있다. Lameron Harbor의 사례는 어부들과의 협의 및 토론을 거치지 않은 지시, 어업의 경험적 특성을 무시한 정책에 의한 갈등을 소개했다. Tasucu Bay 어업 사례에도 1983년 새우 저인망 어업을 허용

하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어장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았다. 어업은 직업적 특성상 기회와 위협의 요소에 대응하여 유연한 전략 전환이 필요한데 면허나 허가 형태의 정부 개입은 어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버크스(Berkes, 1986)의 세 가지 성공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은 협동조합 현장, 시장 또는 경찰과 같은 외부 권한이 ‘필요할 때’는 ‘사용가능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 가능화’는 공유지 이용에 있어서 막연한 사용자 집단의 배제를 용이하게 하고 자원 이용에 대한 지역 규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결국 국가의 법, 지방정부, 공식적 조직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감시활동과 규칙 집행 활동은 공동체 내부 조직과 어부들에게 맡겨질 때 효율적이다.

(7) 공유자원의 생산력과 사용자의 재생산

근본적으로 공동 관리 자원과 사용자의 ‘존재’ 즉, 공유자원과 사용자의 재생산 여부는 성공적인 공동체 자치의 필수 조건이다. 공유자산 자체의 생산력 감소나 노동력의 고령화 및 노동 유입의 감소는 공유지 ‘관리’의 문제를 넘어 자체 ‘존립’의 문제와 관련된다. 현재와 같이 공동체 생산방식 지속성의 의미를 전통 문화의 전승, 전통에 대한 자부심 등의 가치에서 찾는다면 생산 기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을지, 지금과 같은 공동체 관리의 방식이 앞으로도 유용할지는 더 생각해야 할 문제다.

3. 제주해녀 공동체의 공유지 관리 특성

1) 제주해녀 공동체 내·외부 환경의 변화

해녀(海女)는 기계장치 없이 맨몸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호흡조절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

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다(송원섭 외, 2023). 장비 없이 잠수하는 이러한 작업 방식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해녀들은 단독 작업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따라서 해녀의 경제활동은 작업 방식의 특성상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해녀박물관 발간자료, 2015). 제주해녀 공동체는 ‘물질’이라는 어로 방식의 친환경성과 개별 해녀 단독 잠수의 위험성 외에도 바다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관리하며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소득분배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독특한 생산과 분배체계, 자율적 공동체의 형성과 자발적 규범에 의한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제주해녀 공동체는 공유지 관리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강경민, 2015; 고은솔·정상철, 2018).

그러나 제주해녀 공동체는 현재, 내·외부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내부적으로 급격한 해녀 수의 감소와 고령화로 공유자원의 관리·사용자의 재생산에 있어 부정적 이슈에 직면했다. 이것은 제주해녀 공동체 지속가능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동체 문화의 전승 주체, 공유지 사용·관리 주체가 사라지고 있음을 뜻한다. 외부적으로 큰 변화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이다.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에서 제주해녀문화가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했다(고미, 2023). 이후 ‘제주해녀어업’은 2015년 12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는 다른 어업방식과 차별되는 맨몸 채취의 방식, 자연 친화적인 생태환경 유지 방식, 공동체를 통한 관련 지식과 기술의 전승 방법 등으로 제주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냄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후속 조치로서 ‘해녀’는 2017년 5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은솔·정상철, 2018; 고미, 2023; UNESCO and Heritage 홈페이지). 공동체가 가진 가치의 보존과 전승에 있어서 문화유산 등재는 반가운 일이나, 동시에 다양한 주체의 개입, 그로 인한 자치적 성격

약화 가능성, 과도한 상업화 등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유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온 제주해녀 공동체가 현재의 내·외부적 변화와 위협 아래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며 공유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화 이후 그간 해녀 연구는 대부분 해녀의 독특한 작업 방식에 기반한 공동체 문화, 전통적인 공동체의 생산방식 등을 문화인류학적으로 분석하거나 해녀 수 감소와 고령화, 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제주해녀 공동체 문화의 전승과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대부분이다(김권호·권상철, 2016; 고은솔·정상철, 2018). 그러나 제주해녀 공동체는 자원을 공유하며 공동생산을 기본 가치로 삼는 경제적 생산 공동체이며 경제적 활동에서 파생된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 사회적 관계를 가진다(고은솔·정상철, 2018). 이에 다음 절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공동체 자치 모델로서 제주해녀 공동체 내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제주해녀 공동체 생산체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신뢰와 호혜성을 형성하는 생산과 분배체계

제주해녀 공동체 기본 생산방식은 공동채취, 공동판매이다. 해산물 채취 작업 시 모든 해녀는 함께 물에 들어가는 공동작업의 형태를 취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혼자 물에 들어간다면 공동체 조직 내에서 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김권호·권상철, 2016). 함께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형태(양경숙, 2019)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채취한 해산물은 어촌계에서 취합, 전량을 모아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판매금액에서 어촌계 수수료, 조합 수수료 등 각종 기금을 제외하고 어촌계를 통해 해녀들에게 돈이 지불되며 작업에 참여한 해녀들이 나누어 갖는다(좌혜경, 2002; 좌혜경·권미선, 2009; 권상철, 2015; 양경숙, 2019). 그러나 제주해녀 공동

체의 분배방식은 공동체 자치 모델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균등 분배와 다른 형태를 보인다. 제주해녀 공동체는 공동으로 채취·판매하지만, 개인이 채취한 양만큼 차등하여 개인 소득이 된다(좌혜경·권미선, 2009). 그래서 채취한 해산물은 무게 측정 후 수합되며 즉 ‘함께’ 조를 이루어 물에 들어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지만 누구나 똑같은 양을 채취하지 않기 때문에 해녀 개인이 채취한 해산물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좌혜경, 2002). 해녀 공동체는 상군, 중군, 하군으로 능력에 따라 계급이 구성되어 있는데 상위계급 해녀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김권호·권상철, 2016).

공유자산에 대한 공동체 자치 모델에서는 공동 분배가 호혜성을 발달시키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나아가 공유자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차등 분배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발생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제주해녀 공동체는 발현될 수도 있는 개인주의 성향을 공동체 내 복지 체계로 극복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예는 ‘애기바당’, ‘할망바당’으로 불리는 구역의 지정이다. 애기바당은 수심이 낮아 해녀가 된 지 얼마 안된 초보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구역을, 할망바당은 고령 해녀들을 위해 먼바다의 소라 중 크기가 작은 것을 가까운 앞바다에 뿌려서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한 구역을 뜻한다(양경숙, 2019; 김권호·권상철, 2016). 할망바당은 물질 능력이 뛰어난 상군 해녀는 출입할 수 없고 기량이 달리더라도 할머니 해녀가 아니면 할망바당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지 못한다(양경숙, 2019). 젊은 시절 상군이었던 해녀들도 나이가 들면 해산물 채취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연장자와 연소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의 개념이다.

(2) 공식·비공식 조직의 역할 분담과 제도화된 명시적·암묵적 규범

제주해녀 공동체와 관련된 조직은 마을어장 전체를 다루는 ‘어촌계’와 보다 해녀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명 ‘해녀회’가 대표적이다.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계통조직으로 조직되었다. 어촌계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조직이지만 수협이 가진 어업권¹⁾이 비 법인체인 어촌계로 온전하게 이양되기는 쉽지 않았다(노우정, 2021). 그래서 어업권은 수협으로부터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다가 1975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어촌계는 어업면허의 우선권을 갖게 되었고 어업권의 주체가 되었다. 어촌계는 수협의 기능 일부와 수협이 갖는 권리의 직접적인 행사를 담당하는데 어업권의 취득과 관리 주체로서의 기능, 어업권으로 취득한 사업의 경영, 어업권의 전용 행사 등을 수행한다(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홈페이지). 제주도 수협에 소속된 마을 단위의 어촌계는 102개로(수산경제연구원 어촌계현황조사, 2022) 어촌계 가입 자격은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어촌계의 어업권 행사로 어장에 대한 배제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지 사용자들은 그들 간에 경합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몫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세부 조항이 필요하다. ‘어장관리규약’²⁾은 이러한 세부 규칙을 정리한 것으로 번식기, 일정 크기 이하인 해산물의 채취, 특정 어구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어장관리를 위한 불가사리 퇴치, 불법 어선 감시 및 고발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동기금 사용에 대한 회계 기록 및 보고 의무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김경돈·류석진, 2011). 공식적인 규약 외에 문서로 공식화되지 않은 조항들도 있는데, 공동어장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순환적으로 채취하고, 일부 구역을 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어린 종패를 방류하거나 잡힌 어린 해산물들을 그 지역에 방생하거나, 외부인들의 불법 채취에 대한 순번을 통한 감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반이 발각되면 경중에 따라 비방, 압수, 입어 정지, 공동체 배제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가해진다(김권호·권상철, 2016). 이러한 명시적, 암묵적 조항의 제도화는 규범준수의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경합성의 특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경합성을 인식하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감시’와 ‘제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해녀회가 수행한다.

해녀는 지역수협, 어촌계, 해녀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김권호·권상철, 2016; 고미, 2023) 수협 이사회와 해당 어촌계 총회의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금과 가입비 명목의 비용이 발생한다. 어촌계 가입 후에는 관할시 해양수산과에 해녀 신청을 해야 해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양경숙, 2019). 가입과 승인 규정에는 거주 기간, 최소 조업일수, 채취 규모 등의 조건이 정해져 있다. 구성원인 해녀들은 조를 짜서 규약 및 규범에 대해 엄격한 감시 활동을 한다(김권호·권상철, 2016; 좌혜경·권미선, 2009). 해녀의 물질 작업은 서로 근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감시가 쉽고 규범을 어긴 경우 그 행위는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에게 쉽게 알려지며 배반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호 감시는 비용 절감의 기능도 가진다.

해녀 공동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작업 및 공동체 관습에 대한 비공식적 교육이다.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는 공동체 내 서열화는 해녀라는 직업이 고도의 훈련과 끊임없는 교육을 요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하며(고미, 2023) 암묵적 지식은 상군에서 중군으로 또다시 하군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지식의 전달은 주로 ‘불턱’ 또는 현대의 탈의장에서 이루어진다. 불턱은 해녀들이 물질하러 가기 전·후 옷을 갈아입고 몸을 말리는 곳으로 쉼터의 역할을 한다(양경숙, 2019). 여러 가지 화제로 대화를 나누고 싸 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 과정을 통해 상군 해녀들로부터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물질에 필요한 간조, 조류와 바람의 방향, 수산물별 적정 채취 날짜 등 경험에 의한 지식뿐 아니라 해녀 문화에 대한 지식,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배운다(좌혜경, 2002; 양경숙, 2019). 또한 해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단체 조업의 특성을 가진 해녀들은 조업 전, 모두 불턱에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당면 안전에 대해 회의한다. 해당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때까지 지속해서 의논한다. 즉 불턱은 상호 협조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직업학교, 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좌혜경·권미선, 2009; 정성훈, 2014; 김권호·권상철, 2016).

(3) 약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동체 동질성

제주해녀의 경우, 과거에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중심이었으나, 문화유산등재 이후에는 제주도 권역 전체를 묶는 해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해녀 공동체와 관련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양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기존 마을 단위 해녀 공동체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등장으로 인해 혼합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 그동안 생업 활동을 주축으로 한 생산 공동체에서 유산의 전승이나 해녀문화 콘텐츠 발굴과 활용의 문화유산 공동체로 구성이 재편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유산을 보유한 사람들 자체라기보다 유산의 전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목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약화된 공동체의 동질성은 의사결정 및 합의 과정의 효율을 낮추고 암묵적 지식과 규범 전달에 취약하며 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을 높인다(함한희, 2017).

(4) 체화된 공동체 의식

사실 공유자원과 공동체 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과 태도는 공유자원 보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윤순진·차준희, 2008). 특히 해녀의 작업 형태는 혼자서 하기 힘든 활동이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양경숙, 2019) 공유자원 이용 주체들은 자원에 대한 공유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해녀 공동체의 경우 어장의 관리 형태에서 이

러한 자원의 공유성과 공동체 의식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해녀들은 공유자원인 마을어장에 대해 1년에 두세 번, 공동으로 해안가와 조간대 청소를 하고 잡초를 베는 ‘개담이’ 혹은 ‘바당풀캐기’를 한다. 또 소라나 전복의 종묘를 마을어장에 뿌리는 것도 해녀의 의무사항이다(유철인, 2018). 앞선 판매 및 분배의 방식에서 수익 중 일부를 마을 어장과 공동체의 관리 기금으로 떼어둔 후 분배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이다. 공유자원과 관련된 주체들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관리에 참여하고 이러한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는 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김권호·권상철, 2016). 각 주체에게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는 상태가 아니지만, 사유의 상태에서도 공동의 이해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공유자원으로서 유지가 가능하다(윤순진·차준희, 2008; 김권호·권상철, 2016). 공유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해녀들은 ‘남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김권호·권상철, 2016).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해녀 공동체 내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후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획화된 ‘학교바당’, ‘넙계바당’(좌혜경·권미선, 2009) 등의 예는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공동체 의식이 넓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

1975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어촌계는 수협이 갖는 권리의 직접적인 행사를 담당하며 어업권의 주체가 되었다. 어촌계는 지방정부의 최하부 조직이고 수협의 일원이기는 하나 외부 권력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호받고 있고(김권호·권상철, 2016) 해녀회 역시 선주, 어부, 양식장 경영자 등의 조직을 아우르는 어촌계에 속해있어 어촌계를 상부 기관으로 두고 있으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노우

정, 2021; 김권호·권상철, 2016).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생업과 관련된 활동에서의 권리를 해녀 공동체에 이입하고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 온 지방정부는, 문화유산등재 이후 해녀보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³⁾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생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녀 공동체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방 혹은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 것이다. 해녀보존의 정책에는 문화의 전승과 보존 정책만이 아니라 소득보존 정책도 마련되어서 고령의 해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것은 해녀들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보호정책이라기 보다는 개별 해녀 지원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생업의 유지를 위한 지원의 성격이 있으므로 결국 해녀 공동체가 생업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숙진, 2017; 함한희, 2017; 이창수·이상고, 2018).

(6) 자원의 생산성과 노동의 재생산

제주해녀 공동체는 수산물의 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목적 기반의 공동체이다. 해녀들의 물질 이유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경제적 현실성에 있으며(좌혜경, 2002) 이러한 경제적 측면은 일찍부터 제주도 경제의 전반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다(조철기 외, 2023). 해녀 공동체 자원관리의 근본적인 목표 역시 생산성의 유지라 할 수 있다.

생산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긍·부정적 관점으로 나뉘는데 노우정(2021)은 제주해녀 공동체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립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제주해녀 대부분은 농업 활동도 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위험한 물질 작업을 유지하며 겸업하는 이유를 물질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효용 때문이라고 보았다. 고령의 해녀가 물질 작업을 계속하는⁴⁾ 이유 역시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고 제주도 행정당국에서 지원하는 ‘소득보전제도’나 ‘은퇴해녀제도’ 등에 호응이 크지 않는 이유 역시 수당보다 물질 자체를 훨씬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

표 3. 연도별 제주도 해녀 수

연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2년
해녀수(명)	14,143	7,804	6,827	5,789	4,995	3,226

자료: 해녀박물관 통계자료(2023년 8월 검색), 노우정(2021) 재구성

표 4. 제주도 해녀 연령대별 구성(2022년 기준)

연령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계
해녀수(명)	4	24	63	175	870	1,328	762	3,226

자료: 해녀박물관 통계자료(2023년 8월 검색)

면 제주해녀들의 소득은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5년 최고에 이르러⁹⁾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도 200억에 가까운 수익이 해녀 중심 마을어업을 통해 거둬졌으며 이것을 현직 해녀 수와 비교하여 고려하면 1인당 5백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측했다. 연구에서는 해녀 수산물 채취의 수익성이 높은 이유를 해녀가 채취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것이며, 자연산에 대한 선호 증가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생산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도 수익이 높은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양경숙, 2019; 김권호·권상철, 2016; 제주해녀박물관 발간자료, 2009)에 따르면 생산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2009) 보고서에 따르면 안덕면 화순리의 경우 화순 화력발전소의 설치, 국책사업으로 인한 조류 차단, 연안 항구 지정에 따른 공동어장 축소 등으로 해녀 물질 작업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정읍 동일리와 영락리의 경우 인근 양어장의 설치로 어패류 먹이가 사라지면서 어장이 황폐화되었다. 보고서 인터뷰 중 대정읍 동일리 해녀는 처음 고무 옷을 입기 시작할 때 채취하는 수확량이 많아지자 당시에는 장래의 자원고갈을 걱정하며 나이 든 해녀들이 고무 옷 착용 여부에 대해 서로 다툼 정도였는데 지금은 작업할 해산물이 거의 없는 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하며 해녀들 수입이 한 해 700~800만 원 정도는 되냐는 질문에 70~80만 원도 안 된다고 대답했다. 양경숙(2019)

도 해녀는 물질이 끝나면 또다시 손질 작업에 임해야 하는데 작업은 보통 서너 명의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며 시간과 인력 비용을 고려하면 각자의 수입은 도시 기준 인건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게다가 초보 해녀들의 경우에는 채취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종일 물질을 하더라도 몇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전부라서 해녀 활동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보였다.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서는 해녀 인력을 재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생산성의 저하는 노동 인력의 재생산에 있어서도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존재하는 해녀의 고령화, 신규 해녀 부족은 공동체 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다(조인애, 2019). 표 3은 산업화 이후 1974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제주도의 해녀 현황으로 1970년 14,143명에 비해 1980년에는 55% 감소하였고 이후 2022년 그 수는 3,226명에 불과하다.

표 4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해녀 3,226명 중 70세 이상 고령인 해녀가 2,090명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한다. 주목할 만한 신규 해녀의 유입이 없다면 10년 후 해녀의 수는 1,000여 명 이상 사라질 수 있다.

4.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전망

제주해녀 공동체의 공동체성 유지와 공동체에 의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제주해녀 공동체의 생산방식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 내 사회경제적 특성은 아래 표 5와 같이 내·외부, 강·약점으로 구분, 분석된다.

먼저, 생산, 판매, 분배, 관리방식을 통해 형성된 신뢰와 호혜성, 공동체 의식은 강점으로 작용한다. 해녀들의 공동채취, 공동판매의 방식은 공유지 사용주체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한다. 동료는 경쟁자이지만 물속에서 닥칠 위험에 대해 상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해녀들은 동료 해녀에 대한 신뢰가 깊다(고미, 2023). 그리고 ‘아기바당’, ‘할망바당’과 같은 구역의 지정은 호혜성에 근거한 공동체 분배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 관리를 의무화한 규범과 지역사회와 관리 조직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의 관습은 분배와 관리의 방식을 통해 해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자원의 공유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채취, 판매, 분배방식을 통한 신뢰와 호혜성, 공동체 의식은 제주해녀 공동체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된다.

두 번째, 네트워크와 규범의 측면에서, 제주해녀 공동체와 관련된 네트워크 조직은 협동조합, 어촌계, 해녀회 등이 있으며 구성원 간에는 또 다른 비공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식·비공식 네

트워크의 고른 발달은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통한 접촉은 효과적인 사회·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네트워크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상호 호혜성을 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복잡한 정보도 비교적 쉽게 전달될 수 있으며, 대면접촉으로 신뢰, 규범, 또 다른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이철우 외, 2006; 이홍택, 2018). 특히 이들 조직 간에는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서로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것도 강점이다. 공식적 네트워크인 협동조합, 어촌계, 해녀회는 공유지가 가진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배제성의 확보가 법적으로 명시되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배제성을 합의나 규범에만 의존한다면 외부 침입에 대해 내부의 공유지 사용자들의 힘만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 침입자에게 내부 사용자들이 정한 평판, 제재나 배제 등은 큰 위력이 없다. 그래서 공적 기관에 의한 배제성의 법적 보장은 중요하다. 이후 세부 규칙은 직접적으로 공유지를 사용하는 집단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부 규칙이 제정되면 해녀회는 규칙을 어기는 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여 규범을 통해 경합성에 대한 불안감을 낮춘다. 생산체계 내에서의 규범 설정

표 5. 제주해녀 공동체 사회경제적 특성의 강·약점

	내부	외부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내 신뢰, 호혜성 → 규범에 대한 신뢰, 구성원에 대한 신뢰, 분배의 호혜성 · 해녀회, 불턱 등과 같은 비공식 네트워크의 역할 → 지식전달과 학습, 정보교류, 감시와 제재의 규범 수행, 민주적 의사결정 · 자원의 공유성에 대한 인식과 내재된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어촌계와 같은 공식적 네트워크의 역할 → 비배제성과 경합성 방지를 위한 입법의 가능성 · 협동조합, 어촌계, 해녀회의 수평적 거버넌스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의 폐쇄성 → 신규 해녀 유입의 어려움 · 전체 해녀의 고령화와 해녀 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의 위기 →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 사회적 혼합 발생 → 해녀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 유입 가능성

과 자발적 규범준수 역시 제주해녀 공동체의 사회자본으로 이것은 공유지의 지속성을 향상시킨다. 비공식 네트워크인 불턱에서의 모임은 당면 안건의 민주적 해결, 해녀문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생산방식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에 와서 불턱이 탈의장으로 대체되면서 자칫 약화될 수 있는 조직의 상군, 중군, 하군의 체계 및 학습과 회의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인위적 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제주해녀 공동체의 공유지 관리기능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네트워크 측면에서 약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역할에 충실한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은 강점이나, 공식적 네트워크는 폐쇄적 성격을 보인다.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폐쇄성과 개방성으로 네트워크를 결속형(bonding)과 교량형(bridging)으로 구분하는데 일부 네트워크 연구에서 교량형이 결속형 네트워크에 비해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동체 유지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권경희, 2022). 물론 네트워크의 폐쇄성은 공유지의 배제성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해녀 개체 수 유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김권호·권상철, 2016). 제주해녀 공동체는 현재 고령화와 해녀 수 감소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직 네트워크의 폐쇄적 성격은 노동의 재생산에 악영향을 주며 향후 공동체 자체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16년 신규 해녀의 입직이 용이하도록 해수부와 국회에 어촌계 정관의 개정을 건의, ‘준계원의 경우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입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양경숙, 2019). 또한 제주도에는 2곳의 해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해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해녀가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절차 또한 복잡하다(조인애, 2019).

네 번째 생산성의 위기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해녀들의 활동은 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의 유지와 경제성의 확보는 중요한 부분이다. 물

질은 조류나 금채기로 인해 일년 내내 작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녀들은 물질 작업 후 발농사를 경작하는 형태 즉 농업과 겸업하거나(좌혜경, 2002) 해녀의 집과 같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녀들이 함께 조를 짜서 번갈아 요리하여 판매하는 등(좌혜경·권미선, 2009) 물질 이외의 활동으로 경제력을 보충해 왔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응, 시장가격의 보장 등의 방법 외에 문화유산지정 이후에는 제주해녀들의 경제력 보장을 위해 제주해녀 문화를 통해 수익과 일거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제주해녀문화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일정한 경제적 효과에 의한 지역 발전도 도모하고자 한다(고은솔·정상철, 2018). 그리하여 생업으로서의 경제적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러나 제주해녀문화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고유의 공동체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하며 그동안 경제적 생산성에만 몰입해 왔던 제주해녀들에게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지는 부담이 존재한다.

다섯 번째는 문화유산지정 이후 제주해녀 공동체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됨으로 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제주해녀 공동체는 공동의 목적의식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강한 동질성을 가진 조직으로 유지되었으나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제주해녀문화’가 등재된 이후,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까지 통과되면서 제주해녀문화 전승을 위해 문화의 전승자로서 해녀들의 의식 고취, 의료비 지원,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일반인 대상 강좌 운영, 학생 대상 학교 교육 활성화, 제주해녀문화 교과서 수록, 마을어장 자원조성과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제주해녀문화체험마을 조성, 제주해녀들의 물질 및 신앙생활의 공간인 불턱, 해신당 등 해녀유산에 대한 보전과 관리 등 사회, 환경, 교육, 경제의 각 분야에서 한 다양

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은솔·정상철, 2018).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주체의 개입을 발생시킨다. 특히 국가나 지방정부가 문화경쟁력 확보, 지역 경제의 혜택을 목적으로 제주해녀 공동체를 운용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공동체 자치에 의해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되었던 공유자원과 해녀 공동체는 자체적인 운용 능력을 상실하고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제주해녀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공유지의 사용, 보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생업의 측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공동체에 의한 공유지 관리가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수 사용자들 간에 공동된 의식적·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관계자 간 이질성이 큰 경우, 상습적인 갈등과 갈등 해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최정수, 2003; 김권호·권상철, 2016). 또 공동체의 자발성이 약화된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 간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이질성을 가진 집단들이 대립의 관계 혹은 수직적인 상명하달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결론

제주해녀 공동체는 자연친화적인 방식, 공동체를 통한 관련 지식과 기술의 전승 방법 등을 인정받아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주체이자, 공유자원의 사용 및 관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녀 수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본 연구는 하던의 공유지 비극론을 바탕으로 공유지에 대한 공동체 자치 모델의 우수한 사례로 지금까지는 공유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온 제주해녀 공동체가 현재의 내·외부적 변화와 위협 아래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며 공유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자치 모델에 대한 기존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공유지 관리를 위한 성공 요소와 방해 요소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결과 공동생산과 균등분배의 생산방식, 협동조합의 존재와 역할, 조직 가입의 조건, 사회적 혼합, 합의된 규범, 공동체 의식, 생산력 등이 공동체 자치 모델에서 의미 있는 요소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생산방식 내에서 제주해녀 공동체가 공유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내부 속성을 비교 분석했는데, 제주해녀 공동체는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생산과 분배, 공식·비공식 네트워크의 균형 있는 발달과 네트워크 내 합의된 규범, 그리고 각 네트워크의 명확히 구분된 역할, 사용자 집단 내 내재된 공동체 의식과 공유성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식적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생산성의 위기, 문화유산지정 이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혼합의 발생 등은 공유지 자치 모델로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약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당면한 내·외부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제주해녀 공동체 내부 기제가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효율적인 공유지의 관리를 위한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고령화에 대비하고 전반적인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해녀학교의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존재하는 해녀학교는 해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지만, 해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쉽게 해녀가 될 수 없고 해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사리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조인해, 2019). 결국 해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녀학교의 교육 내용과 직업 해녀의 연계를 높이고 생업 목적을 가진 해녀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조직의 개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해녀학교를 통해 공동체 정신의 계승, 불턱과 같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대신할 암묵적 지식의 학습 및 정보 전달의 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해녀 공동체를 중심으로 발생할 다양한 주체

의 개입과 사회적 혼합을 전체 사회의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승의 주체와 각 주체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문화 전승의 주체도 해녀이며 공유자원의 사용 및 관리의 주체 역시 해녀가 됨은 당연하다. 또 지금까지 정부 기관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정부, 수협, 어촌계, 해녀회가 수평적 관계를 가진 것처럼 관광, 콘텐츠 개발, 경관 관리 등 새롭게 주어질 해녀 공동체 역할에서도 해녀 공동체문화와 가장 밀접한 해녀가 관리의 대상이 아닌 권한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의 경제력 보장을 위한 해녀들의 물질 외 기타소득의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저변이 확대되고 그 결과로 다양한 해녀문화산업이 출현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녀 공동체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이나 산업화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지나친 관광 자원화와 산업 콘텐츠화로 인해 자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훼손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광 관련 콘텐츠의 개발이 해녀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외부 전문가의 주도로 진행되는(조철기 외, 2023) 경우 수익에서 공동체와 전승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 해녀 공동체문화의 경제적 활용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일차적으로 해녀 공동체에게 돌아가도록 하고(고은솔, 정상철, 2018), 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

- 1)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제1장 2조).
- 2)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이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제1장 37조).
- 3)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조소현, 2020).

- 4) 2020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해녀는 제주도 전체의 58.5%이다(노우정, 2021).
- 5) 당해 연도 어업소득은 총 368억 6천 6백만 원이다(노우정, 2021).

참고문헌

- 강경민, 2015,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모델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계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9, pp.295-324.
- 고미, 2023, 제주해녀 출가(出嫁) 배경과 정착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은솔·정상철, 2018,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경영,” 예술경영연구 45, pp.317-341.
- 권경희, 2022, “대도시 산업지역사회의 사회자본 변화 특성과 도시재생에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 대구시 북성로 공구골목을 사례로,” 대구경북연구 21(1), pp.133-159.
- 권상철, 2015,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지역 사례: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pp.395-414.
- 김경돈·류석진, 2011,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순차적 해소를 통한 공유의 비극의 자치적 해결방안 모색: 제주도 동일리 해녀의 자치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3), pp.163-188.
- 김권호·권상철, 2016,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제주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pp.49-63.
- 김도균, 2010, “어촌마을의 사회자본과 어촌계-3개의 어촌마을 비교연구,” 농촌사회 20(1), pp.195-232.
- 김민주, 2015, “공유자산의 자치적 관리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의 승어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3), pp.51-77.
- 김숙진, 2017,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본 지역공동체의 실제: 7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 pp.49-69.

- 김운상, 2010,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국가정책연구 24(3), pp.89-105.
- 노우정, 2021, 제주 해녀공동체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관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섭·조철기·안중수·이종호, 2023, “‘해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9(1), pp.81-93.
- 양경숙, 2019, 제주해녀의 직업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철인, 2018, “제주해녀의 유산화: 무형문화유산과 세계 농업유산,”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pp.73-79.
- 윤순진·차준희, 2009,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릉 송림리 마을숲 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 pp.125-166.
- 윤홍근·안도경 율김,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이정림, 2016,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의 조건: 공유자원의 자율적 관리와 사회적 경제” 도서문화 48, pp.199-242.
- 이창수·이상고, 2018, “어업인 참여 수산자원관리 운영에 대한 연구: 수협의 휴어제 운영 사례,” 수산경영론집 49(3), pp.29-47.
- 이철우·박순호·권경희, 2006, “대도시 산업지역사회의 사회적 네트워크 실태와 정책대안: 대구광역시 북성로 공구상가를 사례로,” 지역사회연구 14(1), pp.25-48.
- 이홍택, 2018,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에 관한 개념 틀: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3), pp.254-269.
- 정성훈, 2014,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과 공동체 파트너십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864-875.
- 제주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해녀박물관 발간자료.
- 제주해녀박물관, 2015, 제주해녀, 제주해녀박물관 발간자료.
- 조소현, 2020, “제주해녀문화의 보전 및 전승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무형유산학 5(1), pp.113-137.
- 조인에, 2019, 제주 해녀학교의 학습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철기·이종호·안중수·송원섭, 2023, “제주 해녀에 관한 사회적 담론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9(2), pp.189-202.
- 좌혜경, 2002, “일본 쓰가지마[菅島]의 ‘아마’와 제주 해녀의 비교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36, pp.229-270.
- 좌혜경·권미선, 2009, 제주 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최재송·이명석·배인명, 2001,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충남 보령시 장고도 어촌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0(2), pp.152-172.
- 최정수, 2003, “생태관광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pp.233-247.
- 함한희, 2017,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제주 해녀공동체의 도전과 과제: ‘유산화(heritization)’ 과정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 2(2), pp.7-25.
- Berkes, F., 1986,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mmon Property Resource Management*(pp. 63-83),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 Berkes, F., 2005, “Commons theory for marine resource management in a complex world,” *Senri Ethnological Studies* 67, pp.13-31.
- Davis, A., 1984, “Property rights and access management in the small boat fishery: A case study from southwest Nova Scotia,” *Atlantic Fisheries and Coastal Communities: Fisheries Decision-making Case Studies*, pp.133-164.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 Netting, R. M., 1976, “What alpine peasants have in common: Observations on communal tenure in a Swiss village,” *Human Ecology* 4(2), pp.135-146.
-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Ostrom, E., 2003, “How types of goods and property rights jointly affect collective actio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5(3), pp.239-270.
-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scogwipo> (최종열람일: 2023년 9월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최종
열람일: 2023년 8월 23일).

수산경제연구원, <https://fei.suhyup.co.kr/> (최종열람일: 2023
년 7월 2일).

해녀박물관, <https://www.visitjeju.net/kr/> (최종열람일: 2023
년 8월 28일).

UNESCO and Heritage, <https://heritage.unesco.or.kr/> (최종
열람일: 2023년 9월 1일).

교신: 조철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
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53-950-5857,
이메일: ckcho@knu.ac.kr

Correspondence: Chul-Ki Ch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5857, E-mail: ckcho@knu.ac.kr

최초투고일 2023년 10월 20일

수 정 일 2023년 11월 14일

최종접수일 2023년 11월 27일